

光日春秋



오연석
티에이치이벤트캐피탈 대표
전 경시대 교수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승자는 이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성능과 가격 경쟁을 넘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묻는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안보 자산이 되었고, ‘신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가치이자 통화가 되었다. 이 거대한 지각변동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현미경처럼 검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등장한 개념이 바로 ‘클린 칩(Clean Chip)’, 즉 신뢰 기반 반도체다. 아무리 싸고 빨라도 출처와 공정, 보안의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 설 수 없다. 한국은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며 기술력 위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독보적 평판을 더했다.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강력한 진입장벽이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60%를 넘기며 독주 체제를 굳혔고, HBM4 시대로 접

‘클린 칩’ 시대, 피지컬 AI의 심장은 한국이다

어들며 글로벌 고객사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턴키(Turn-key)’ 전략으로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강력한 반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가상 세계를 넘어 실제 물리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의 이동에 있다.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국방·의료기기 등 물리적 실체를 가진 AI가 핵심 산업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만큼이나 이를 구현할 정밀 부품과 전력 시스템, 그리고 대규모 통합 제조 인프라가 필수적이 되었다. AI가 ‘두뇌’라면 이를 움직일 ‘몸체’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한국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수준 높은 제조 기술이 피지컬 AI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 분석한다. 수만 개의 부품을 정밀하게 통합하는 자동차 시스템 산업과 초대형 구조물에 첨단 제어 기술을 집약하는 조선업의 노하우는 로봇과 스마트 공장의 현실화를 가능케 하는 근육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부터 정밀기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생태계를 한 나라 안에 갖춘 유일한 국가다. 부품-소재-장비-완제품이 최단 거리에서 연결되는 이 구조는 설계 변경과 양산 전환의 속도를 결정짓는 피지컬 AI 개발의 결정적 병기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칩이라는 ‘뇌’만으로는 미래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 칩이 실제 자동차와 로봇에 들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려

면 세계 최고의 제조 파트너가 필요하다. 젠슨 황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피지컬 AI를 함께 현실로 만들 강력한 ‘제조 동맹’이었다.

신뢰 인프라와 제조 인프라의 결합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더욱 독보적으로 만든다.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은 이제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닌 안보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은 기술력과 중립성을 갖춘 한국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택하고 있다. 물론 공급망 분절화와 거점 생산에 따른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부담은 커졌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 살아남은 우리 기업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되는 지금,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며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2025년 반도체 수출 1734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이 더해지면 한국 제조업의 성장 스토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흐름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신뢰와 제조 역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성장’이다. 2026년,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는 성능이나 유행보다 신뢰와 제조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기업과 산업을 보아야 한다.

피지컬 AI 시대, 한국 제조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이유와 한국 중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새해의 결심은 ‘익숙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해인사를 나누는 것이 엇그제인데 벌써 1월 하순에 접어들었다. 세웠던 원대한 계획과 다짐들은 아직도 살아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매년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을 꾸꾸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익숙함과 편안함 속으로 기를 쓰고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 하곤 한다.

변화가 이토록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는 이유 자체가 ‘이전의 나’를 바꾸기 보다 ‘더 잘난 나’를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한다. 광활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를 증명하려는 각별한 노력은 때론 우리를 고립시킨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고달프고 외로우며 진정한 평화는 멀어지는 것 같다.

존재 자체가 소리가 되어 사라지면서 길을 만들어 놓

사라지는 자의 영원성

은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떠오른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무대 뒤로 사라지기를 선택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앞으로 오실 구원자의 길을 준비했던 예언자였다. 당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과 지식인 그리고 기독교권층조차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혹은 자기 자신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만약 그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화려한 인기와 추종 세력을 향해 조금만 욕심을 냈었다면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천사를 단호하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복음 3,30)고 말하며 거절한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소리일 뿐임을 명확히 알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는 메시아라는 빛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그림자 속으로 감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삶과 하느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놀라운 역설을 만나게 된다. 세상의 논리는 ‘가진 자가 이기고, 드러내는 자가 기억된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내어주는 자가 얻고, 사라지는 자가 영원하다’고 가르친다. 결국 세례자 요한은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구

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표시하고 사라진 사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꺼이 잊히기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사라짐으로써 가장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지워버렸고 지워버린 자리에 창조주의 거룩한 뜻을 가득 채웠다.

그의 삶은 어리석어 보였다. 그러나 이 거룩한 바보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은총과 기쁨의 원천이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실현, 존재의 확장이다.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신비가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또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과 닮아있다. 이 흑흑하고 메마른 세상의 광야에서 누군가가 사랑과 희망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역할이다. ‘사라진다’는 말은 결코 엄세적이거나 허무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겸손이며 더 큰 가치를 위해 나를 봉헌하는 용기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자녀의 생명 안에 영원히 남듯,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을 세상과 하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사라짐’은 곧 ‘영원한 현존’의 다른 이름이다. 올 한 해, 나를 드러내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라질 줄 아는 ‘소리’가 되어보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속도전 행정통합, 교육통합은 서두르지 말라

는 특별시의 권한으로 넘겨주는 내용이다. 특목고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마을을 포함한다. 또한 의무교육 범위까지 침범하는 유초중고 외 국법인학교의 부지 매입부터 건축, 운영까지 특례법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특목고를 여러 개 지어 국소수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표심잡기 논리로 남발되었던 공약이다. 국소수 엘리트 교육을 위한 학교를 여럿 지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무슨 효과가 있는가? 지역통합을 통해 지역이 부강해진다고 주장하려면 그 부강해지는 대상은 지역민 모두여야 한다. 현재의 법안에는 지역확장 모두가 통합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도 통합시 기초단체장은 주민 직선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즉 거대 통합 지자체장이 탄생하더라도 내가 사는 단위의 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봉사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전혀 다른 교육환경(도심 과밀학급 vs 작은학교 소멸위기)의 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1명의 교육감이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 교장까지 모두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교육감이 탄생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당적이 없는 교육전문가가 자주성과 전문

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운영하는 자리이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과 그 권력의 발휘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동시에 지역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통합 전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권한은 세지는 이런 교육감 자리, 누가 도전하게 될까? 아마도 교육 전문성은 그다지 필요치 않지만 인지도나 정치경력이 상당한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교육자치까지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보다 인지도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치적에 집중하면 교육 현장은 황폐화 그 자체가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의 균형 발전, 또한 수도권 집중의 무한경쟁 대한민국을 탈피하기 위함이라면 교육은 천천히 가야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만 먼저 초광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은 일단 4년 동안 광역으로 유지한 다음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주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있다.

교육 때문이라도 지역에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교육을 행정통합의 종속품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교육은 별도로 두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社說

행정통합 성공 특별법안 디테일에 달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이제부터는 특별법안을 디테일하게 다듬는 작업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재정·제도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광주·전남이 더 빠르게 통합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핵심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국 3특(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이 중요한데 5국의 선도 역할을 광주·전남 통합이 이끌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속도전이란 지적도 있지만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를 높이고 찬성 여론이 많은 것은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는 것만이 인구 유출을 막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통합 특별법안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광주전남특별시가 무리없이 존속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재정·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명시하자고 뜻을 모은 것도 이런 차원이다. 통합 광역시에 미국 주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자치권의 핵심은 재정 권한에 있다. 정부는 통합 광역시에 4년간 매년 5조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담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신안군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확인된 일이지만 특별법 초안에 주민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신안군민들은 1000kW 이상의 경우 재생에너지 수익금 30%를 특별시에 분배하도록 한 특별법 초안에 반발했는데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받은 햇빛연금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일리만은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렇 말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광주 자율주행차 실증으로 미래차 이끈다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도심을 누비는 일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달리는 모습은 하반기쯤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그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졌지만 도시 전체에서 실증이 진행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에 뒤진 자율주행 기술을 잡기 위해 실증 장소로 광주를 선택한 것인데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기술에서도 선도를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자율주행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핵심으로 첨단3지구에 있는 국가 AI데이터센터가 큰 역

할을 하게 된다. 실제 운영을 위해선 시스템 탑재에 최적화 된 차량과 자율주행 노비 역할을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관제와 운송 서비스를 맡는 플랫폼사, 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없애주는 보험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참여하는 기업에 고성능 GPU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자율주행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감도 높다.

진곡산단-빛그린산단-미래차산단을 잇는 ‘미래차 3각 벨트’와 도심 실증 단지를 연계해 자율주행 소재·부품·컴퓨터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현실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와 결합해 미래차 분야에서도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만큼 잘 준비해서 기대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無等鼓

이미 한참 전 유행처럼 보였던 두쫓꾸는 왜 아직도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을까. 이쯤 되면 ‘이제 줄 지나갈 때도 됐는데’라는 말이 나올 법 하지만 두쫓꾸는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SNS에는 인기 판매점의 두쫓꾸 판매 시간이 공지처럼 공유되고 일부 매장 앞에는 줄을 선 풍경도 낯설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재료가 소진돼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흔했지만 어느새 두바이쫓둑떡같은 변형 디저트로까지

흥미로운 건 유행의 정점이 지난 뒤다. 이미 많은 사람이 두쫓꾸를 맛봤고 ‘못 먹어본 디저트’라는 희소성도 한풀 꺾였다. 그럼에도 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쯤 되니 질문이 생긴다. 두쫓꾸를 향한 집요한 관심은 정말 맛 때문일까. 두쫓꾸 앞에 늘어선 줄은 배고픔의 결과라기보다 감정의 선택에 가깝다. 과거에 비싸다는 걸 알고, 굳이 기다릴 만큼의 맛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고령량 디저트에 대한 경고를 감수하고 사람들은 줄을 선다. “이 정도 수고는 나에게 허락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와 이 유행의 한 가운데를 그냥 지나치

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이 함께 작동한다. 디저트를 사는 행위는 이제 그날의 기분과 만족을 구매하는 일이 됐다. 물건보다 경험을 사고, 필요보다 감정을 설득하며 지갑을 여는 소비 트렌드를 보여준다. 두쫓꾸는 그 흐름 위에 정확히 올라탄 디저트다. 그래서 그들의 두쫓꾸는 아직도 줄을 세운다. 대단한 맛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그놈의 두쫓꾸

기 고



박세벨
전교조 광주지부 부지부장

5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감을 각 시도 단위로 둔다는 법령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교육도 행정 통합의 세트상품으로 묶여서 급하게 그저 ‘빨리 합치면 더 많이 받는다’는 주의로 속고와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화롭고 보기좋은 풍경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교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충남대전 특별법안)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만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광주전남 특별법안)이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법안’을 충남대전이 따라하고 그것을 또 광주전남이 따라하는 형태이다.

세 법안 모두 특목고 설립, 지정, 운영 권한을 통합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